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15
----------	------

제출년월일 : 2018. 9.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민간충전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충전사업자의 공용충전기 설치비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공용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요청 안전에 대한 충전료심의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항 제3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외)

다.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50백만원(예정)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실)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규제개혁추진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20. ~ 9.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충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제9항 중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건물”이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5. · 6. (생 략)

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소유
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
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
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전
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1조의2(충전시설의 종류) ①
(생 략)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
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
에 한한다.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 ② (생 략)

③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
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

-.

가. ~ 마.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충전시설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시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 다만,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충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효율은 시가(時價)를 반영

<p>제12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p> <p>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② ~ ⑧ (생략)</p> <p>⑨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p><u>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u></p> <p>제12조(전용주차장의 설치)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 ----- -----.</p> <p>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	--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사업
 -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민간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

3. 관련조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3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 시·도 유사사업 예산에 근거하여 비용 산정
- 급속충전기 1기에 5백만원 지원
- 사업 추진기간('19년~'22년)내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추정치 계상

나. 추계 결과

- 4개년도 총 금액 : 5,75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편성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5. 작성자 : 미래산업추진본부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별첨]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0	0	0	0	0
세 출		250,000	1,000,000	1,500,000	3,000,000	5,750,000
-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		250,000	1,000,000	1,500,000	3,000,000	5,750,000
재 원 조 달		250,000 (50기)	1,000,000 (200기)	1,500,000 (300기)	3,000,000 (600기)	5,750,000 (1,150기)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 비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1,000,000	1,500,000	3,000,000	5,750,000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250,000	1,000,000	1,500,000	3,000,000	5,750,000
지방채						
기 금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